

‘통일지향적 남북 출판정책개발’

범우출판문화재단 주최 세미나, 민족 동질성 회복 위한 통일지향적 남북 출판정책 논의, 동서독간 체결된 ‘문화협정’ 타산지석 삼을 만 ‘출판, 남북한 평화통일의 첨병돼야’

범우출판문화재단(이사장 한승헌)이 주최한 통일지향적 남북 출판정책개발 세미나가 12월 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렸다. 부길만 동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선 지난 1986년 동서독간에 체결됐던 ‘문화협정’이 남북출판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삼을 만한 사례로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동서독간의 출판교류협력사업 전개과정>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펼친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히 “반관·반민 협의체 형식의 ‘남북출판교류협력위원회(가칭)’와 같은 실천적인 움직임을 통해 남북간의 출판교류를 가속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관·반민 협의체 ‘남북출판교류협력위원회(가칭)’ 제안

이날 세미나에선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두영 원광대 겸임교수가 발제자로, 이찬호 통일부 문화교류과장, 남석순 김포대 교수, 박원경 한국저작권 연구소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통일지향적 남북출판정책과 관련한 초기사업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접근된 바 없는 남북출판정책에 대한 초기사업과제들을 모색, 점검하며, 출판이 평화통일의 첨병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 중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손 연구원은 독일 사례 가운데 양독兩獨이 체결한 <문화협정>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문화분야에 종사하는 각 개인 활동 포함 교류(제1조), 대학과 대학인들 간의 교류(제2조), 문학 예술 영화 박물관 방문공연 관련 교류(제3조, 제4조), 출판분야 교류(제5조) 등으로 구성된 <문화협정>을 계기로 양독은 상대 체제의 사회·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문화협정>이 거둔 가장 큰 학술성과는 ‘공동체계획(Gemeinschaftsvorhaben)’의 대표적 사업으로 진행된 <그림 독일어사전> 편찬 작업. 손 연구원은 분단된 독일이 함께 일궈낸 대표적 학술활동이란 점뿐만 아니라 언어 및 문화보전작업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협력사업의 모범이 되었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특히 개별적 접근이 용이한 출판물이 남북한 상호공감대

형성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분단이란 역사를 공유했던 독일의 사례를 들며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 ▶협력에 대한 입장과 정책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 현황 ▶동서독간 출판분야 교류·협력의 우리에게 갖는 의미 등을 전했다. 교류·협력과 관련해 독일과 우리의 상황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대북정책이 남북한 평화번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평화적 통일을 끌어낸 독일의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를 찾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손 연구원은 동서독 간에 추진되었던 출판분야 교류·협력이 “장벽 속의 구멍” 역할을 담당했다는 독일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며 출판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 마련, 남북한 상황을 고려한 접근방법, 분야선정 및 추진방법 모색,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정부 민간지원을 주문했다.

교류협력 방법 다각화 직거래 방안 모색

이날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두영 원광대 겸임교수는 <남북한 출판교류 협력기반 조성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소규모로나마 지속해 온 남북한 출판물 교역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교류협력방법을 다각화하고 직거래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출판교류협력이야말로 통일과 사회통합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본작업이 될 것”이라며, 손 연구원의 입장에 동감을 표하기도 했다.

은 시장개방의 신호탄이라며, 다자간 협약관계에서 남북출판교류협력에 관한 방법론을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박 소장은 경제 논리를 생각할 때 남측의 편이득을 북한이 우려할 수 있다며 상호주의에 대한 협력방안은 무엇인지를 발제자들에게 물었다.

남석순 김포대 교수는 남북출판정책에 있어 통일지향적 접근방법을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나 민간단체의 남북출판교류 창구가 전무한 이때,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시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통일지향적 관점이야말로 남북출판정책개발에 가장 실효성 있는 접근방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범우출판문화재단은 통일지향적 남북출판정책개발을 장기적 연구과제로 삼고, 북한의 출판시스템 실태 파악 및 분단경험국가의 출판교류협력정책 발전과정 연구, 통일지향적 남북한 출판교류협력정책 개발 및 전개, 통일 이후 남북한 출판체제 통합작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판]

취재 | 박용두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이 교수는 참여정부가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한 이후 경제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출판분야만은 교류의 당위성과 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조차 충분치 않다"며 출판계 내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남북한간의 출판교류실적을 사회·문화분야 출판교류, 남북한간 출판물 교역실태, 인도적 차원의 도서기증별로 살펴본 뒤 남북교류는 주로 저작권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현실에서 남북한 출판교류협력 기반을 확고하게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거래 활성화 모색, 출판여건 황폐화로 북한 내에서 사장된 우수 저작물 공동출판 기반 마련, 출판정보 유기적 교환 위한 국제도서관리제도(ISBN) 공동운영방안 논의, 출판물 생산협력사업 및 기술전수 남북출판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기구간의 대화채널 마련을 제안했다.

'통일지향적 관점, 남북 남북출판정책개발에 유요'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순서에서도 다양한 분석과 대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찬호 통일부 문화교류과장은 "독일 통일과정에 있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제도화"라며 "남북한간 제도장치 마련에 초기부터 각별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상을 싣고 오는 매개물이 출판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박원경 한국저작권연구소장은 북한의 저작권법제정과 베른조약가입

남북출판교류 현주소

이날 이두영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이래 언론·출판분야 방북실적은 118건 신청에 102건 승인, 3건 불허, 10건 철회, 성사 92건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저작물 이용현황을 보면 1992년 여강출판사가 《리조실록》의 복제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최초 사례 이후, 이념성은 적으며 전문성이 있는 북한서적과 전자출판물들이 공식경로를 거쳐 국내에 보급되고 있다. 영진닷컴은 2003년 11월, 북한 인민대학습당과의 공동번역 및 출판협력사업을 승인받았으며, 누리미디어는 중국을 통해 《고려사》《발해사 연구》 등 고문헌의 북한 번역본을 들여와 CD-Rom으로 출간, 대학도서관 등에 공급했다.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북한저작물의 국내출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저작권의 실질적 권리 행사자인 북한당국과의 직계약은 전무한 실정. 이 교수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출판교류와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